

경제주평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목 차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경제 강국 도약의 대외 장애 요인	4
3. 경제 강국 도약의 대내 장애 요인	10
4. 시사점	15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3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 개 요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p에서 2021~25년에는 △0.5%p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다만, 잠재성장률은 반드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수요 측면에서 획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영원히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 경제 강국 도약의 대외 장애 요인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시장 수요 측면에서 외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향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08년) 연평균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로 하락하였으며, 팬데믹 이후(2022~30년)에는 연평균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의 주된 동인은 공급 측면에서 기술체화(Technological embodiment)기의 도래,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Peak China) 진입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4차 산업혁명(DX)기의 기술체화기로 생각된다. 한편, 중국이 1만 달러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노동력 또는 노동생산성의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GVC에서 DVC로의 전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는 GVC의 약화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는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 그리고 2025년에 0.7p로 하락하였다. 특히 G2가 DVC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2017~20년)부터 관세전쟁을 통해 자국 산업의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0년경부터 기존 외수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의미를 가지는 쌍순환(雙循環)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은 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가 2024년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섹터이다. 따라서 GVC의 약화는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③ 트럼프 라운드의 본격화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구축에 따른 글로벌 경제·산업 지형의 변화로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들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은 글로벌 시장 전반의 긴장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가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을 빈번히 수정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이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및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이 크게 변화 중이다.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에 달하였으나 2024년에는 19.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 비중은 12.0%에서 18.7%로 상승하였다. 또한, 총 해외투자에서 대중 투자와 대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2024년 기준 대미 투자 비중은 34.1%, 대중 투자 비중은 3.0%에 그치고 있다.

④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미·중 갈등 심화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전략과 기술패권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력에 대응할 수준의 신흥강자의 부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사회의 오래되고 견고한 교조(敎條,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하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1980년 미국의 약 10%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미국의 70.7%에 달하였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10~2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결국, 미국에서 중국의 부상을 긴급히 견제해야 할 동기가 대두되면서, 시장과 기술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를 가지고 갈 수 없고, 특히 기술패권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 받고 있는 난감한 상황이다.

⑤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신흥 공업국의 수출경쟁력 상승 및 생산능력 확대로 한국의 세계 상품수출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향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여타 신흥 공업국들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점유율은 2015년 3.2%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2.9%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1.22%p 상승하였으며, 베트남(0.65%p), 인도(0.27%p), 브라질(0.26%p) 등 신흥 공업국들의 수출도 빠르게 확대 중이다. 결국 범용 제품에 대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이 생산비의 이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기술·품질 경쟁력까지도 빠르게 추격하면서 한국 산 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제약되는 상황이다.

■ 경제 강국 도약의 대내 장애 요인

① 자본 축적 정체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흥국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해외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입을 도모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 축적이 정체되고 있다. 최근 한국으로의 FDI 유입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은 급증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FDI 순유출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는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정책의 영향을 받아, 세계적으로 수출보다 현지생산 중심의 시장 접근 전략이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는데, 이에 따라 한국의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6~19년) 연평균 6.5%에서 이후(2021~24년) 9.1%로 급증하였다.

② 노동력의 절대 부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성장잠재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출산의 영향이 장래 주력 경제 활동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물적 생산요소 투입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의 정점은 2012년(73.4%)이며 2030년에 66.6%, 2040년에 58.0%, 2050년에는 51.9%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령인구도 급증하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1.8명에서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의 한계

정부의 재정 여력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지출의 무게중심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서 멀어지는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우선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현재 약 GDP 50%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양호한 상황이다. 단, 저성장에 따른 충분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 복지 수요의 확대로 국가부채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특히, 그동안의 재정 지출의 용도별 비중을 보면, 정부투자보다 정부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공 부문의 자본투자 확충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현재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는 447조 원으로 정부투자 117조 원의 3.8배에 달한다. 그 추세를 보면 정부소비/GDP 비중은 2010년 13.5%에서 2024년 17.5%로 크게 높아졌지만, 정부투자/GDP 비중은 같은 기간 5.0%에서 4.6%로 큰 변화가 없다.

④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연

미래 세계 산업 지형을 급변시킬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지연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견인할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 부문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 중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약 5.0%로 이스라엘(6.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미래 유망 기술 수준은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미국 및 EU와 큰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유망시되는 AI 분야에서 한국의 준비 정도가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의 2023년 AI 준비지수(AI Preparedness Index)에서 한국은 0.72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5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부상하

는 신기술·신산업들이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미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갈 몫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⑤ 비효율적 시장 환경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은 것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한국 경제의 성과는 뛰어나지만,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의 효율성이 낙후되어 있어 향후 경제적 성과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4년 20위에서 2025년에 27위로 하락하였는데, 부문별로 보면 경제 성과는 뛰어난 편이나, 정부효율성(31위)과 기업효율성(44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기업효율성은 무려 전년대비 21위나 하락하였으며, 그 세부 분야에서 노동시장이 53위(전년대비 22위 하락)로 매우 낮은 경쟁력을 보인다. 또한, 기업의 경영 관행 측면에서도 55위에 그쳐 기업의 효율성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시사점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 일곱째,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여덟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아홉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1. 개 요

○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증가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 기여도의 하락
 -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05년 4.7%에서 20년이 경과한 현재 2021~25년 잠재성장률 수준은 2% 내외로 분석됨
 - 최근 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 급락에 있는데,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p에서 2021~25년에는 △0.5%p로 하락함
 -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킴
 -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 다만, 잠재성장률은 반드시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의 생산요소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수요 측면에서 획기적 모멘텀이 발생할 경우 잠재성장률의 예상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¹⁾

<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 OECD 추정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 OECD 평균과 같아지고 2041년부터는 0%대에 진입하면서,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한국 경제의 위상은 크게 높아져 있는 상황이나, 향후 예상되는 경제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경제 강국 문턱에서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세계 경제 규모 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함
 -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함
 - 현대경제연구원²⁾에 따르면 2023년까지의 성장 속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이 G7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음³⁾
 -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 GDP, 1인당 국민소득을 영원히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함
 - IMF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면, 2030년경에는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1인당 GDP로는 13위를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GDP 규모 자체는 현재 13위에서 멕시코와 호주에 뒤져 15위로 하락할 수 있음
-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 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 세계 GDP 규모 순위(조 달러) 변화 >

순위	Country	2010	순위	Country	2025
1	US	15.05	1	US	30.51
2	China	6.14	2	China	19.23
3	Japan	5.76	3	Germany	4.74
4	Germany	3.47	4	India	4.19
5	France	2.65	5	Japan	4.19
6	UK	2.49	6	UK	3.84
7	Brazil	2.21	7	France	3.21
8	Italy	2.15	8	Italy	2.42
9	India	1.68	9	Canada	2.23
10	Russia	1.63	10	Brazil	2.13
11	Canada	1.62	11	Russia	2.08
12	Spain	1.43	12	Spain	1.80
13	Australia	1.25	13	Korea	1.79
14	Korea	1.19	14	Australia	1.77
15	Mexico	1.11	15	Mexico	1.69

< 세계 1인당 GDP 순위(달러)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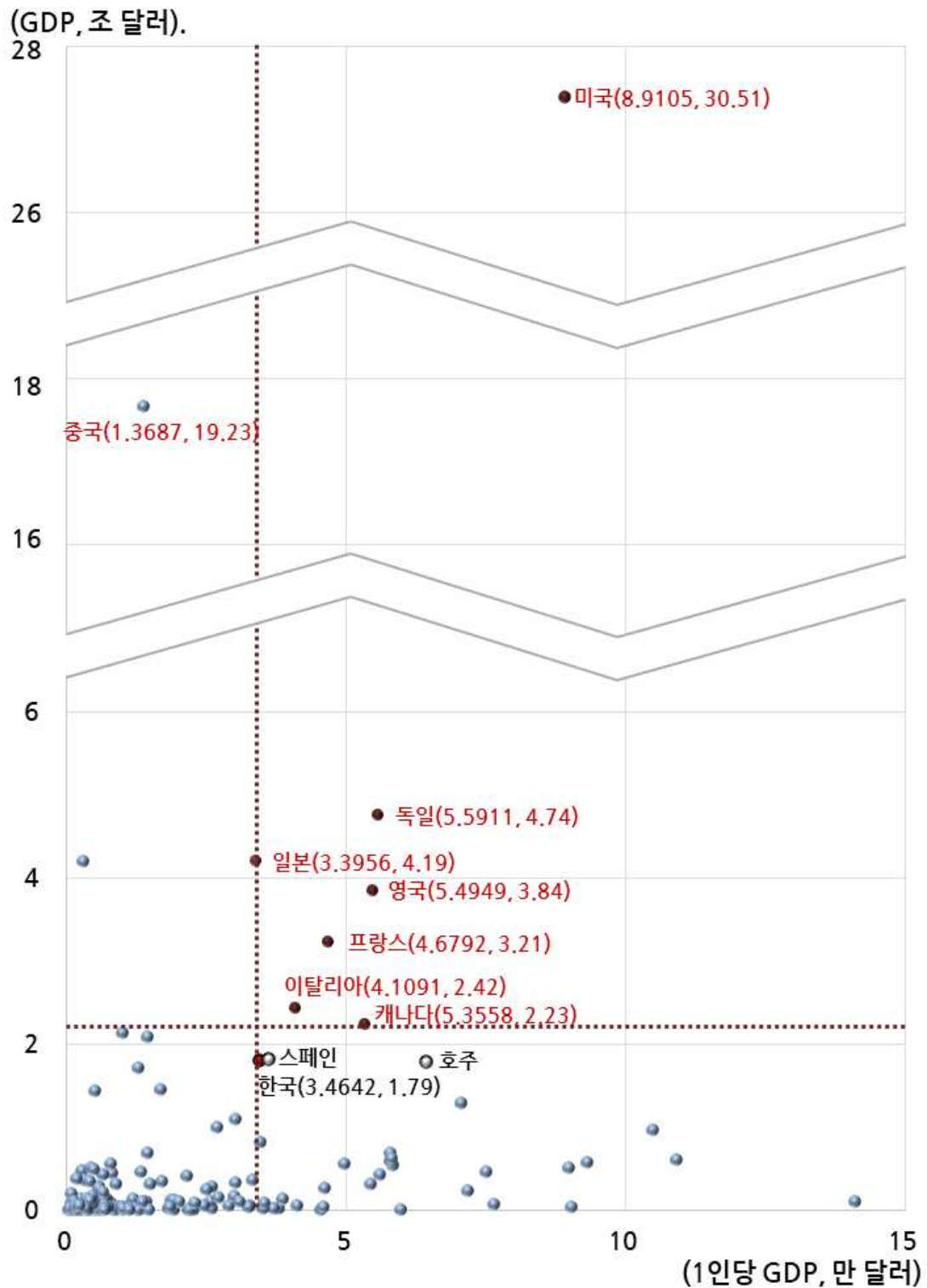
순위	Country	2010	순위	Country	2025
1	Australia	56,585	1	US	89,105
2	Sweden	52,334	2	Netherlands	70,480
3	Netherlands	51,473	3	Australia	64,547
4	US	48,586	4	Sweden	58,100
5	Canada	47,626	5	Belgium	57,772
6	Japan	45,136	6	Israel	57,760
7	Belgium	44,461	7	Germany	55,911
8	Germany	43,233	8	UK	54,949
9	France	40,989	9	Canada	53,558
10	UK	39,642	10	France	46,792
11	Italy	35,964	11	Italy	41,091
12	Israel	31,451	12	Spain	36,192
13	Spain	30,624	13	Korea	34,642
14	Greece	26,680	14	Taiwan	34,426
15	Korea	24,069	15	Japan	33,95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

주: 1인당 GDP는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 및 비산유국 대상.

- 2) 현대경제연구원(2024), “G7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조건 - 중장기 한국 경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경제주평, 24-13.
- 3) 동 보고서에서는 2010~23년 동안 GDP 및 1인당 GDP 증가율에서 한국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 기간 동안의 각국 GDP 및 1인당 GDP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한국의 G7 진입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함.

< 전 세계 국가의 GDP 및 1인당 GDP(2025년)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전망치를 이용한 도시).

주: () 안의 값은 (1인당 GDP, GDP). 파키스탄 2024년, 가자지구 2023년 기준.

2. 경제 강국 도약의 대외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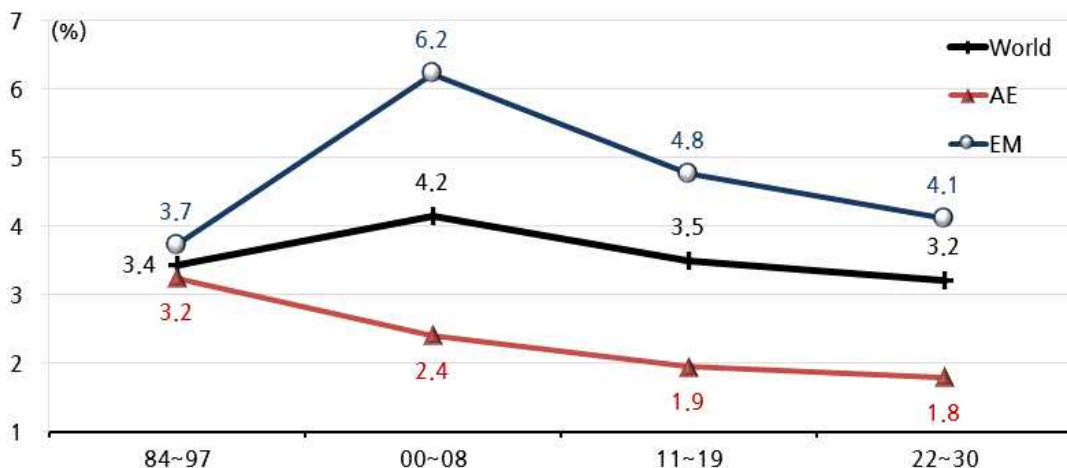
①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

○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이는 시장 수요 측면에서 외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관찰되면서, 향후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IMF의 최근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해 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2000~08년 연평균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팬데믹 이전 2011~19년 연평균 3.5%로 하락함
- 한편 팬데믹 이후 2022~3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2%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선진국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를 기점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
- 신흥·개도국은 선진국의 저성장을 보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나, 향후 역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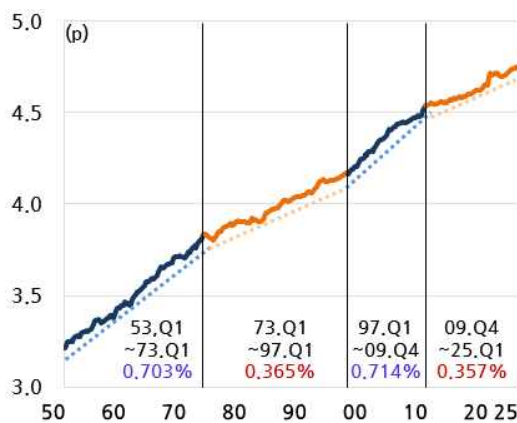
< 시기별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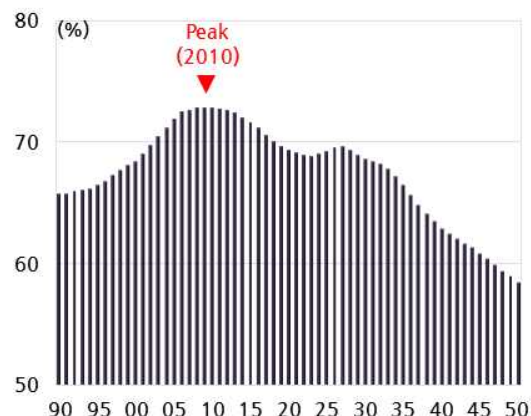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의 주된 동인은 공급 측면에서 기술체화기의 도래,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이라고 판단
- (기술체화기의 도래 - Technological embodiment) 3차 산업혁명기와 4차 산업혁명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되며, 신기술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기까지의 시간을 의미
 -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기술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 경제 전반의 성장력이 약화될 수 있음
 - 1973~97년까지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2차 산업혁명 전기 과 3차 산업혁명 IT 간의 기술 체화기로 보임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지는 사례는 4차 산업혁명 DX기의 기술체화기로 생각됨
- (중국의 중진국 함정 진입 - Peak China)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중장기 저성장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언급될 수 있으나, 주된 원인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인 노동력 또는 노동생산성의 위축을 들 수 있음
 - 중국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의 정점 시기가 한국, 일본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 향후 성장잠재력의 위축이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함⁴⁾

< 미국 노동생산성 지수(로그) 추이⁵⁾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LS 통계 이용 계산).

< 중국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 >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4) 중국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정점은 2010년에 도래했으며 당시 1인당 GNI는 4,340달러에 불과함, 반면 아시아 선진국인 한국의 정점 시기는 2012년으로 당시 1인당 GNI는 26,865달러, 일본은 1992년으로 1인당 GNI는 31,03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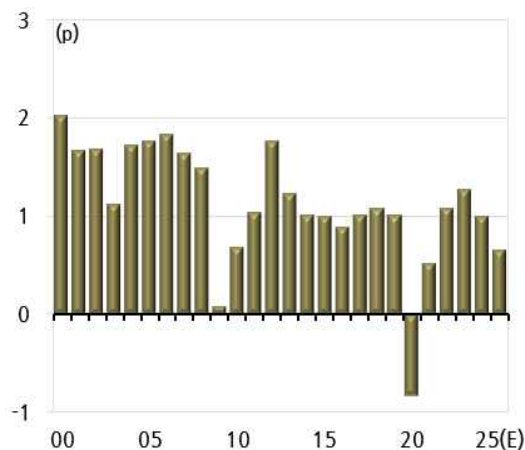
5) 그림 내 숫자는 기간중 평균 분기 증가율(로그 차분)을 의미.

② GVC에서 DVC로의 전환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급망의 무게중심을 GVC에서 DVC로 전환하는 트렌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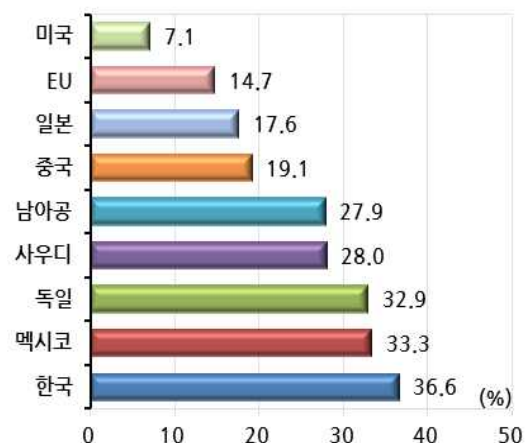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 사슬의 약화와 DVC Domestic Value Chain, 국내 가치 사슬 비중의 증가로 세계 교역탄성치 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가 2023년 1.3p에서 2024년 0.9p 그리고 2025년에 0.7p로 하락함
 - 특히 G2가 DVC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 2017~20년 부터 관세전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주력함
 - 중국도 2020년경부터 기존 외수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내수 비중을 높이는 의미의 쌍순환 雙循環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주요 제조업에서의 수입대체전략을 가속화 중임
- 한국의 수출의존적 성장 구조를 감안할 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시장의 정체는 수요 측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한국의 수출의존도 상품수출/GDP 는 2023년 G20 국가 중 독일, 사우디에 이어 3위였으나, 2024년에는 36.6%로 1위를 기록함

< 세계 교역탄성치(교역증가율/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이용 계산).

< 주요국 수출의존도(2024년 수출액/GDP)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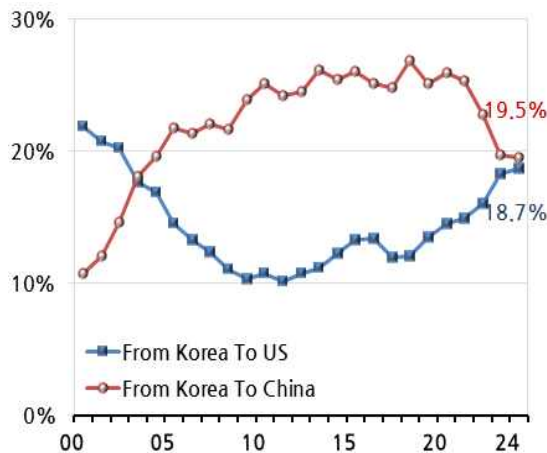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BOK 통계 이용 계산).
주: EU는 역외 수출 기준.

③ 트럼프 라운드의 본격화

○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 구축에 따른 글로벌 경제·산업 지형의 변화로 한국 경제와 국내 기업들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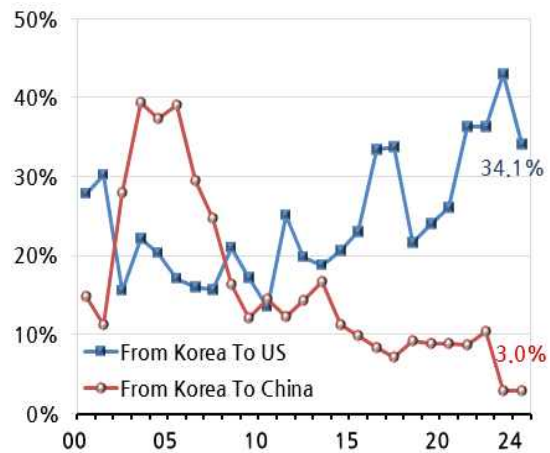
- 현재 진행형인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은 글로벌 시장 전반의 긴장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판단
 -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에 따른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력 약화가 예상됨
- 더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여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을 빈번히 수정해야 한다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것
 -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및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이 크게 변화 중임
 -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8%에 달하였으나 2024년에는 19.5%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대미 수출 비중은 12.0%에서 18.7%로 상승함
 - 또한, 총 해외투자에서 대중 투자와 대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대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2024년 기준 대미 투자 비중은 34.1%, 대중 투자 비중은 3.0%에 그침

< 한국 총 수출에서 대미 및 대중 수출 비중 추이 >



자료: 관세청.

< 한국 총 해외투자에서 대미 및 대중 투자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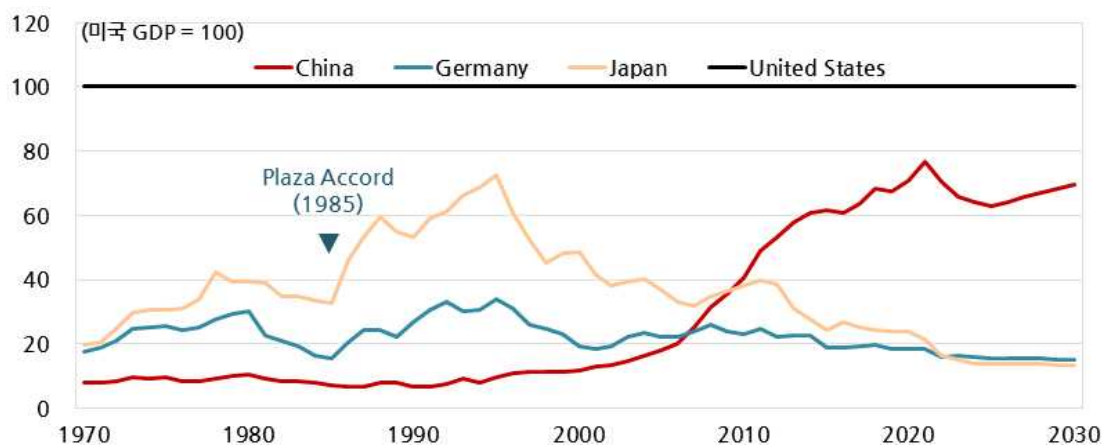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④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장접근전략과 기술패권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증대

- 미국의 경제력에 대응할 수준의 신흥강자의 부상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사회의 오래되고 견고한 교조⁶⁾ 하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과거 일본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수준에 육박한 적도 있었으나, 80년대 중반의 플라자합의 Plaza Accord 등의 미국의 견제 정책으로 현재 일본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13.4%에 불과함
 - 중국의 경제 규모는 1980년 미국의 약 10%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미국의 70.7%에 달하였고,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10~20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단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시장과 기술에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전략을 적극 추진 중임
-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를 가지고 갈 수 없고, 특히 기술패권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 주요국 GDP의 미국 대비 비중 추이 및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를 이용한 계산).

6) 教條,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⑤ 신흥 공업국의 빠른 추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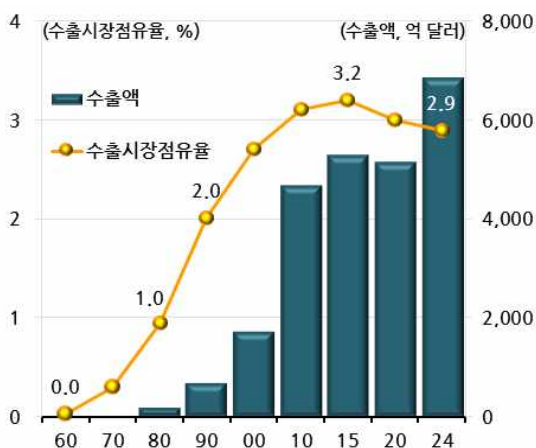
○ 신흥 공업국의 수출경쟁력 상승 및 생산능력 확대로 한국의 세계 상품수출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향후에도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위상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여타 신흥 공업국들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한국의 상품수출이 세계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 5,267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4년 2.9% 6,836억 달러로 0.3%p 하락함
- 같은 기간 중국의 점유율은 1.22%p 상승하였으며, 베트남 0.65%p, 인도 0.27%p, 브라질 0.26%p 등 신흥 공업국들의 수출이 빠르게 확대됨
- 한편, 선진국·중진국 그룹에서도 호주 0.29%p, 멕시코 0.29%p 등이 수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결국 범용 제품에 대해 중국 등 신흥 공업국이 생산비의 이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기술·품질 경쟁력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 상승이 제약되는 상황

< 한국의 수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이용 계산).

< 주요국 세계 시장점유율 >

	2015 ^A (%)	2024 ^B (%)	B-A (%p)
중 국	13.92	15.14	1.22
베 트 남	0.98	1.63	0.65
호 주	1.15	1.44	0.29
멕 시 코	2.32	2.61	0.29
인 도	1.63	1.90	0.27
브 라 질	1.17	1.43	0.26
튀르키예	0.92	1.11	0.19
말레이시아	1.22	1.40	0.18
네덜란드	3.48	3.64	0.16
한 국	3.22	2.89	△0.3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IMF 통계 이용 계산).

3. 경제 강국 도약의 대내 장애 요인

① 자본 축적 정체

○ 국내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흥국 이전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도모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자본 축적이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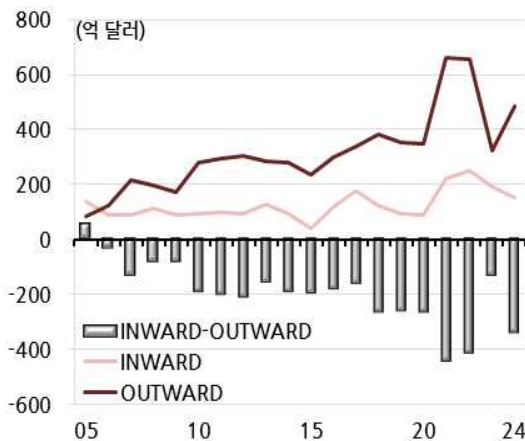
- 최근 한국으로의 FDI 유입은 정체된 반면 해외로의 FDI 유출은 급증함에 따라 순유출 규모가 크게 증가

- FDI 순유출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
- 이는 트럼프 1기 이후 미국의 투자 유치 정책으로 한국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늘리는 등 현지 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 전략이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반면 국내투자는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이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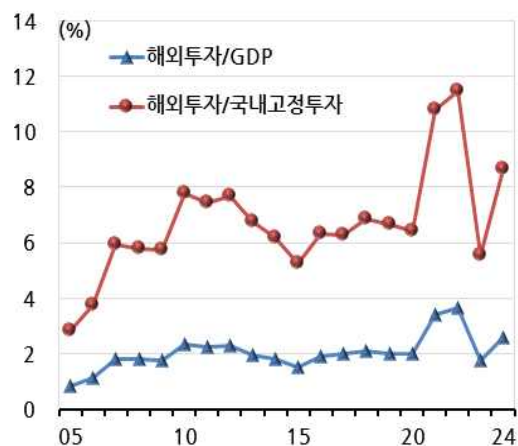
- 해외투자/고정투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6~19년 연평균 6.5%에서 이후 2021~24년 9.1%로 급증함

< FDI 순유입(유입-유출) 추이(OECD 기준) >



자료: OECD.

< 해외투자의 대 GDP 및 고정투자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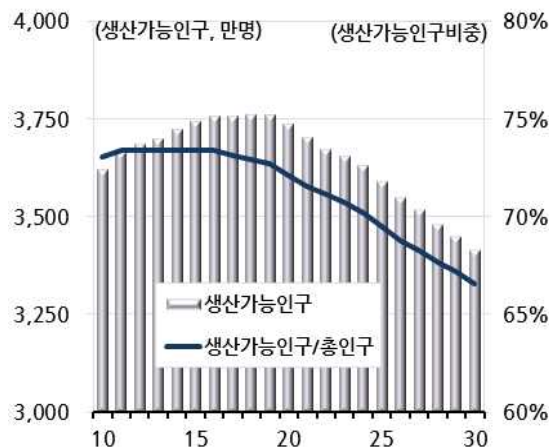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BOK 및 한국수출입은행 통계를 이용한 계산).

② 노동력의 절대 부족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이 성장잠재력 약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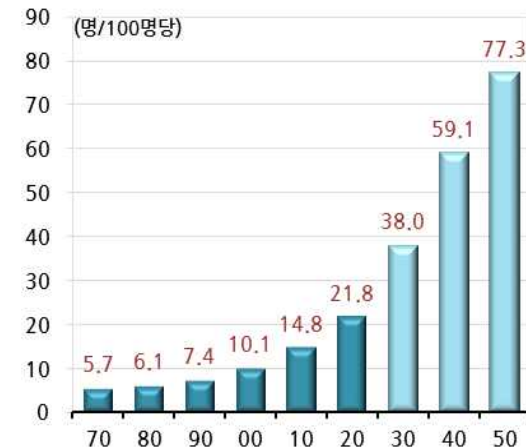
- 저출산의 영향이 장래 경제 활동의 주력 연령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물적 생산요소 투입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통계청의 2023년 12월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의 정점은 2012년 73.4%이며 생산가능인구수의 정점은 2019년으로 약 3,762만 8,000명 생산가능인구/총인구 비중 72.7% 임
 - 미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에 66.6%, 2040년에 58.0%, 2050년에는 5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령인구도 급증하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 점도 경제의 성장 감속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 한국의 노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 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1.8명에서 2030년 38.0명, 2050년에는 77.3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가능인구(15-64세) 및 비중 추이 및 전망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 노년부양비(65세이상인구/생산가능인구)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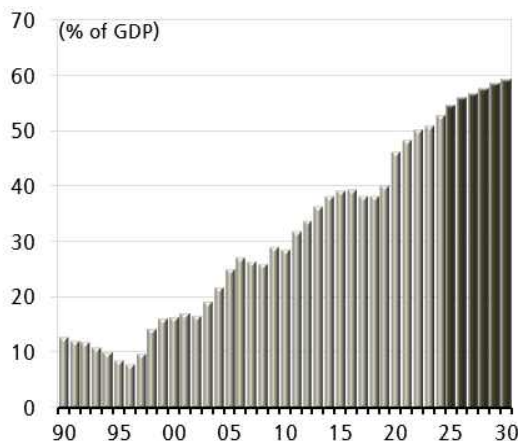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12)」.

③ 정부의 성장잠재력 확충 역할의 한계

○ 재정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재정 지출의 무게중심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보다 단기 시장 수요 보완으로 빠르게 이동되는 현상이 관찰

-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현재 약 GDP 50%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양호한 상황임⁷⁾
 - 단, 저성장에 따른 세수 부족과 선진국 대비 낮은 사회안전망 수준 제고를 위한 재정 수요 확대로 2030년경에는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특히, 그동안의 재정 지출의 용도를 보면, 정부투자보다 정부소비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공공 부문이 투자를 통해 경제 내 자본을 확충하는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
 - 2024년 현재 국민계정에서 정부소비는 447조 원으로 정부투자 117조 원의 3.8배에 달함
 - 정부소비/GDP 비중은 2010년 13.5%에서 2024년 17.5%로 크게 높아졌지만, 정부투자/GDP 비중은 같은 기간 5.0%에서 4.6%로 큰 변화가 없음

< 한국 국가부채/GDP 비율 추이 >



자료: IMF.

<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기준.

7) 2024년 기준 OECD 평균은 70.7%이며, IMF 권고 선진국 임계수준은 85%.

④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육성 지원

○ 미래 세계 산업 지형을 급변시킬 수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지연되면서 수요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을 위축

-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술 부문에서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지속
 -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약 5.0%로 이스라엘 6.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함
 - 그러나 기술 수준은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미국 및 EU와 큰 격차가 존재할 뿐 아니라 AI는 중국에도 열세를 기록함
- 특히, 향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유망시되는 AI 분야에서 한국의 준비 정도가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
 - IMF의 2023년 AI 준비지수 AI Preparedness Index⁸⁾ 에서 한국은 0.727포인트로 조사 대상 174개국 중 15위를 차지함
 - 최근 부상하는 신기술·신산업들이 승자독식 勝者獨食, Winner takes all 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고 갈 몫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주요국 R&D투자/GDP 비율(2023년) >



자료: OECD.

< 국가전략기술 11대 분야별 수준·격차(최고기술평가국 추경 소요 연수) >

	한국	중국	EU
반도체·디스플레이	1.3	1.9	1.6
이차전지	0.0	0.9	3.2
첨단모빌리티	2.1	2.1	0.4
차세대원자력	5.0	4.5	2.5
첨단바이오	3.1	2.6	1.1
우주항공·해양	11.8	5.8	3.4
수소	3.3	3.9	0.2
사이버보안	2.3	1.4	0.9
인공지능	2.2	1.3	1.4
차세대통신	1.4	0.6	0.6
첨단로봇·제조	2.3	2.5	0.5
양자	4.2	0.8	0.5

자료: KISTEP 「2022년 기술수준평가」.

8) AI 준비 지수(AIPI)는 국가의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및 노동 시장 정책, 혁신 및 경제 통합, 규제 및 윤리를 포괄하는 거시구조 지표를 기반으로 174개국의 AI 준비 수준을 평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AI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⑤ 비효율적 시장 환경

○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경제·사회 시스템의 뒷받침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은 것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현재 경제적 성과는 뛰어난 편이나,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낙후됨에 따라 향후 경제적 성과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4년 20위에서 2025년에 27위로 하락함
 - 부문별로 보면 경제 성과는 뛰어난 편이나, 정부효율성 31위 과 기업효율성 44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기업효율성은 무려 전년대비 21위나 하락하였으며, 그 세부 분야에 서 노동시장이 53위 전년대비 22위 하락의 낮은 경쟁력을 나타냄
 - 또한, 기업의 경영 관행 측면에서도 55위에 그쳐 기업의 효율성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 나아가 선진국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 성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성도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인당 노동생산성⁹⁾은 2021년 기준 OECD 평균의 85%, G7 평균의 77%, 그리고 미국의 5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IMD 국가경쟁력 순위 >



자료: IMD.

< 2025년 IMD 국가경쟁력 4대 부문 한국 순위 >

	순위	전년대비
경제 성과	11	+5
정부 효율성	31	+8
인프라	21	△10
기업 효율성	44	△21
생산성	45	△12
노동시장	53	△22
금융	33	△4
경영관행	55	△27
태도·가치관	33	△22

자료: IMD.

9) 한국생산성본부 통계 기준.

4. 시사점

첫째,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 현재 시장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이해되며, 지난 80년대의 생산성 논쟁 시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고수했던 기업들이 몰락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생산성 제고에 주력했던 기업들이 급부상하는 산업 지형의 변화가 관찰됨
- 현재의 저성장 과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산업과 기업의 생존력을 보장하는 것임
- 나아가 새로운 산업 혁명기의 특성인 승자독식의 시장 지배구조를 감안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둘째,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 대 미국 및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원부자재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해외에서 국내 또는 인근 국가로 조달선을 전환하는 DVC 또는 NVC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셋째,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이 일단락되었으나, 미국의 통상 질서 체계 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트럼프 라운드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예상되는 추가적인 통상 압력은 미국 내 이익단체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 각국이 밝힌 대미 투자의 이행 정도 점검을 통한 패널티 관세 부과 등임
- 트럼프 라운드는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그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기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분쟁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임

넷째,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 또는 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한중 관계는 민간 중심의 교류 확대를 통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익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아시아 등 주요 신흥개도국과의 통상외교 채널 강화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할 것임

다섯째,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

- 산업계 내에서는 기존 캐쉬카우 cash cow,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사업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신흥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경쟁력 수준을 비교하여 신흥 공업국의 점유율 상승이 확실시되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선제적 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산업 합리화가 가속화되어야 할 것임
- 산업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노력, 제조·서비스 융합 가속화 등의 새로운 ‘한국형 제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여섯째,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이 시급하다.

-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노력 지속, 금융·세제상 지원 강화, 노사 관계 안정, 기업인의 사기 진작 정책 등 다각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전용 특구를 조성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도로 체증, 의료 환경, 한국 고유의 임대차 제도 등의 인프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국내 기업의 유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킬러 규제의 해소 및 글로벌 트렌드인 보조금 확대 등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됨

일곱째,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

- 노동 인구 또는 노동 시간의 감소로 향후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고도화 즉 단위 노동의 부가가치 창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함
- 개인의 경제 활동력 즉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인적 자본의 고도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와 혁신이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미래 산업 구조에 대한 예측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고등교육기관의 인력 공급 간의 불일치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혁신적인 학제 개편 노력이 요구됨
- 나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노동 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시장 구조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참가 확대, 적극적인 이민정책 등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져야 할 것임

여덟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상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발전이 급진전하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시장의 유망한 평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제한된 자원에서 정부가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임

- 다만,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AI에 대한 거품론이 제기되는 등의 반작용도 이슈가 있어, 공공 부문의 투자 분야에 대한 욕식을 가릴 수 있는 분석 능력도 필요함
- 한편, 정부투자가 선택과 집중 기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회 발전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세수 여건의 미흡 등으로 정부지출만으로 충분한 투자 확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민간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과의 공동 투자 나아가 적극적인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한 재원 확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아홉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민간과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의 역할 분담 구조 확립,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계의 빠른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개발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공공 R&D는 사업 성과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보다 ‘시장 실패의 보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R&D 사업의 배분은 ‘불균형 조정’의 관점을 버리고 잘할 수 있는 연구자와 기관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공공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출연 연구소의 임무 지향형 역할 강화 등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함
- 민간 R&D에 개방형 혁신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폐쇄적 기업 문화의 전향적 개선, R&D의 효율적 아웃소싱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 제도의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 임의 규정인 네거티브원칙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강제화시키는 등 규제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OECD에서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채용·해고의 유연성 확보, 임금체계 개편, 퇴직자 재고용 인센티브 도입, 직업·평생 교육 지원 등의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함
- 기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해야 하나, 자칫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 동기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	(2072-6235, juwon@hri.co.kr)
이부형	동향분석팀장	(2072-6306, leebuh@hri.co.kr)
이택근	연구위원	(2072-6266, tklee@hri.co.kr)
신지영	연구위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시연	연구위원	(2072-6248, syroh@hri.co.kr)